

지지자도 헛갈리는 트럼프 화법

총기 소유권 유세 발언 논란
민주당 “힐러리 저격 부추겨”
트럼프 “단합 호소한 것 뿐”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사진)가 이번에는 총기 소유 및 휴대 권리를 보장한 미국 수정헌법 2조 지지자들에게 민주당 대선후보 힐러리 클린턴의 생명을 위협하도록 교사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의 발단은 트럼프의 9일(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 주(州) 윌밍턴 유세 발언에서 비롯됐다.

트럼프는 이날 유세에서 “힐러리는 근본적으로 수정헌법 2조를 폐지하려고 한다”면서 “아무튼 그녀가 (대선에서 승리해 현재 공석 중인) 연방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단언했다.

클린턴이 집권할 경우 진보 우위 구도의 연방대법원을 앞세워 수정헌법 2조 폐지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주장인 셈이다.

트럼프는 그러면서 “아마도 수정헌법 지지자들이 있긴 하지만...”이라고 덧붙였다.

바로 트럼프가 침입한 이 대목이 문제가 됐다.

클린턴 캠프의 선대본부장인 로비 무크는 당장 “트럼프의 말은 위험한 것”이라



면서 “대통령에 도전하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폭력을 조정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에릭 스왈웰(캘리포니아) 연방 하원의원은 아예 트위터에서 “트럼프가 누군가에게 클린턴을 죽이도록 제안한 것”이라며 백악관 비밀경호국(SS)이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트럼프 측은 트럼프가 총기권 지지자들의 단합의 힘을 역설한 것뿐이라고

클린턴 캠프의 폭력조장 주장을 일축했다.

트럼프 캠프의 제이슨 밀러 대변인은 “트럼프는 단지 수정헌법 2조 지지자들이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언급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수정헌법 2조 지지자들에게 관련 법률이 폐지되지 않도록 그들의 집단적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점을 호소한 것이라는 게 트럼프 캠프의 설명이다.

트럼프도 이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자

신의 발언은 총기 권리 운동의 힘을 언급한 것 뿐이라면서 “다른 어떤 해석도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유세 현장에 있던 사람 중 누구도 자신의 발언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AP는 트럼프 바로 뒤에 앉았던 사람들을 포함한 일부 지지자들이 트럼프의 발언에 깜짝 놀란 것을 봐서 다르게 해석한 사람도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CNN 방송은 트럼프의 모호한 발언이 클린턴의 생명을 위협한 것인지 아니면 클린턴 저지를 위한 정치적 행동 강화를 촉구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을 촉발했다고 전했다.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가 총기 소유자들에게 관사를 혹은 현직 대통령을 향해 그들의 무기를 사용하라고 선동한 것인지 아니면 그 외 다른 행동을 부추긴 것인지의 확실치 않다고 해석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가 클린턴에 맞서 수정헌법 2조 지지자들이 스스로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고 분석했다.

클린턴이 수정헌법 2조를 폐지하려고 한다는 트럼프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도 나왔다. 클린턴은 앞서 좀 더 강화된 총기규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했지만, 총기권을 규정한 수정헌법 2조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분명히 밝혔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연합뉴스



러시아를 방문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오른쪽)이 9일(현지시간) 상트페테르부르크 콘스탄틴 궁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에르도안은 이날 푸틴과 정상회담을 하고 지난해 터키 전투기의 러시아 전폭기 격추 사건으로 훼손됐던 양국 관계를 전면 복원하기로 합의했다. /연합뉴스

다시 손잡은 ‘긴장 유발자들’

러시아-터키, 관계 복원 합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지난해 터키 전투기의 러시아 전폭기 격추 사건으로 훼손됐던 양국 관계를 전면 복원하기로 합의했다.

푸틴은 터키에 대한 경제 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해 나가겠다고 밝혔고, 에르도안은 에너지 분야 양국 협력 프로젝트 이행을 가속하겠다고 화답했다.

지난해 11월 터키 전투기의 러시아 전폭기 격추 사건으로 양국 관계가 최악의 수준으로 악화한 지 8개월여 만이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해 중순 발생한 자국 군부의 쿠데타 시도 이후 첫 외국 방문지로 러시아를 선택해 푸틴과 극적인 화해를 이루는 데 성공했다.

푸틴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콘스탄틴 궁에서 3시간 이상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의 정상적이고 전면적인 관계 복원을 위한 모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했으며 러시아는 그러한 일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터키로의 전세계 운항을 조만간 재개하고 러시아 내 터키 기업 및 터키인들의 노동 활동에 대한 제한도 가까운 시일 내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상회담은 양국 간 관계 회복이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는 양국 지도부의 판단에 따라 성사된 것으로 분석된다.

난민 문제, EU 가입 문제 등으로 유럽과 불편한 관계를 이어오던 터키는 쿠데타 관련 세력에 대한 초강경 대응으로 EU와 마찰을 빚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시리아 군사개입 등으로 서방과 제2의 냉전을 방불케 하는 갈등을 겪고 있다. 러시아와 터키는 양국 관계 복원을 통해 각자 서방을 압박하려는 공통의 목적을 가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연합뉴스

트럼프 막말 ‘땡큐’... 힐러리, 3대 승부처 재역전

오하이오·플로리다·펜실베이니아 지지율 1~10%p 앞서

미국 대선의 승패를 가를 3대 승부처인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플로리다 주(州)에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 1~10% 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현지시간) 미 퀴니피악대학의 3개 주 여론조사(7월 30~8월 7일) 결과에 따르면 먼저 플로리다(응답자 815명)에서 클린턴은 52%를 얻어 42%에 그친 트럼프를 10%포인트 앞섰다.

또 펜실베이니아(812명)에서는 49%대 45%로 4%포인트, 오하이오(1056명)에서는 46%대 45%로 1%포인트 각각 우위를 보였다.

펜실베이니아와 오하이오는 이번 대선의 핵심 승부처로 떠오른 ‘러스트 벨트’(Rust Belt·쇠락한 중서부 제조업지대) 중에서도 가장 상징성이 큰 지역이고, 플로리다는 캐스팅보트를 쥐는 히스패닉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다.

클린턴은 최대 아킬레스건인 ‘이메일 스캔들’ 논란 여파로 지지율이 추락하면

서 지난달 펜실베이니아와 플로리다에서 트럼프에게 빼앗긴 역전을 허용하고 플로리다에서는 동률의 지지율을 기록했으나 한 달 만에 재역전에 성공하면서 우위 구도를 다시 형성했다.

퀴니피악대학의 직전 조사(6월30일~7월11일) 당시 클린턴은 이전 한 달 전 전 플로리다에서는 동률의 지지율을 기록했으나 한 달 만에 재역전에 성공하면서 우위 구도를 다시 형성했다.

이처럼 클린턴의 지지율이 다시 상승한 것은 성공적으로 끝난 지난달 말 전당 대회의 효과와 더불어 ‘무슬림 비하’ 발언 등으로 논란을 자초한 트럼프의 헛발질의 덕을 본 것으로 풀이된다.

클린턴은 이미 전국 단위 지지율에서도 트럼프를 크게 앞서고 있다.

CNN 방송이 7월29일~8월4일 실시된 CNN/ORC와 폭스뉴스 등 6개 기관의



“섭정은 안 되나요...” “NO” 일왕, 정부 요청 거절

일본 정부는 아키히토(明仁) 일왕의 퇴위 대신 섭정(攝政)을 검토했으나 일왕이 반대를 굽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요미우리(讀賣)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8일 발표된 아키히토 일왕의 대국민 동영상 메시지 가운데 “다행히 건강하다고는 말할 수 있지만”이라는 대목이 막판에 추가됐다.

아키히토 일왕 스스로가 아직 건강하다고 평가한 이 대목은 “정자 진행되는 몸의 쇠약을 고려할 때”라는 언급 앞에 삽입돼 공무 수행에 당장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를 부각했다.

일본 총리 관계자는 추가된 표현에 섭정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아키히토 일왕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는 작년부터 물밑에서 일왕이 퇴위하는 대신 섭정을 두는 방안을 수차례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왕실 업무를 담당하는 궁내청 측은 일왕이 국민과의 접촉 기회를 쌓는 것이 상징으로서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것이 섭정과 어울리지 않는다면 “안된다”고 반유했다. /연합뉴스

노르웨이 “EU 나간 英, EFTA 오지마”

유럽자유무역연합

유럽자유무역(EFTA) 회원국인 노르웨이가 유럽연합(EU)을 떠난 영국의 EFTA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노르웨이는 스위스·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등 비(非) EU 4개국으로 구성된 EFTA 회원국이다. 스위스를 제외한 EFTA 3개국은 EU와 유럽경제지역(EEA)을 맺고 EU 단일시장에 대한 완전한 접근권을 갖고 있다.

대신 EFTA 3개국은 EU 규제를 따르고, 분담금도 낸다. 특히 노동의 자유이

동을 보장한다. 영국이 EU 탈퇴를 바랐던 주된 이유가 이민을 억제하려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선 노동의 자유이동을 제한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영국은 선택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가디언은 EFTA가 멕시코, 캐나다 등 38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가운데 영국이 EFTA에 합류하면 기존 협정들이 재협상 대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는 점이 노르웨이의 우려 가운데 하나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토지, 6000평

투자가치 확신합니다!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30-47번지의 13필지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 가능
- 시세 - 33억원 / 매매 - 27억 (일시불 조정가)
- 계획관리지역 / 개발호재 많음
- 단기투자 최고지역!
- 전원주택 오토캠핑장 펜션 가든 온천 호텔 등등 모든업종 가능
- 개발 후 70억 이상 가치 있음
- 소유자 H. 010-3627-8282